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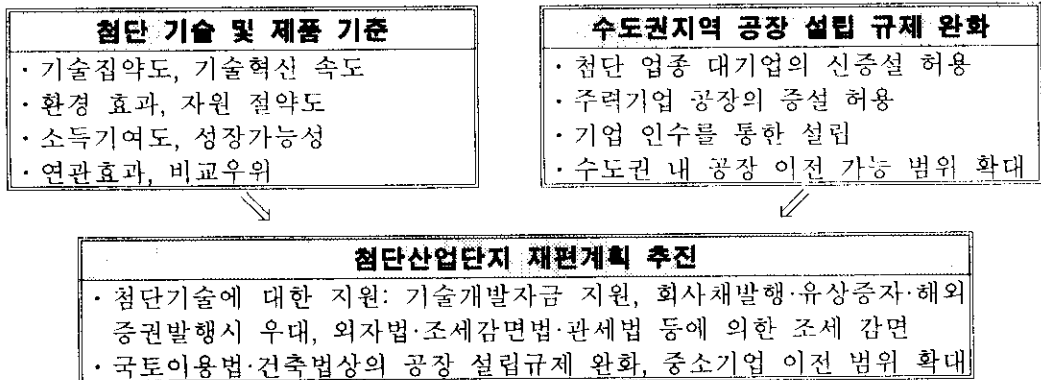
III. 政策 課題

1. 尖端業種 首都圈 工場 許容 計劃

- (背景)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 제공
- (焦點) 수도권 공단 내의 공장 신설·증설·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
- (波及效果)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단지개발에 따르는 직·간접적인 개발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.
- (政策 補完 課題)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르는 문제를 최소화해야 함

- (背景)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 제공
 - 첨단 산업은 특성상 고급 두뇌, 교통·통신망, 연관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대도시에 입지할 필요가 있음
 - 산업기반 조성 정책을 UR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정부 지원 수단으로 활용
- (主要 內容) 통상산업부는 首都圈 工團 內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尖端産業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
 - 이를 위해 95년 4월에는 「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안)」을 관련 부처와 협의, 확정된 후 「첨단산업단지 재편 계획」을 추진할 계획임
 - 인구집중 문제로 수도권 지역에 신단지를 개발하거나 기존 단지를 일괄적으로 재개발하기 어려우므로, 기존 공장의 업종 전환, 이전 및 대기업의 첨단공장 신·증설과 인수를 유도

<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>



- (波及效果)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, 직·간접적인 개발 수요 확대 및 인구 유출 효과도 예상됨
 - 향후 수도권에 대기업 중심의 첨단 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 - 수도권내 대기업의 첨단업종 투자가 허용되고 대기업의 기업 인수 및 첨단업종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지기 때문임
 - 대기업의 첨단 투자 업종과 연관효과가 높은 중소 하청 업체들과 수요 업체들도 첨단단지와의 주변 공단에 신설·이전
 - 단지 개발 자체에 대한 각종 建設·設備 需要 확대
 - 또한 첨단산업의 특성상 정보수집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최신 시설을 구비한 업무 단지의 조성에 따른 건설·설비 수요도 발생
 - 인력이 고급화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주택, 상가, 문화시설에 대한 재건축·개발 수요가 증대
 - 기술·자본 집약적인 첨단 업종이 기존 공단내의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대체하는 경우 인구 유출 효과도 있을 것임

- (政策 補完 課題) 첨단업종으로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촉진시키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
 -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타지역 이전에 대해 이전 용지 알선, 등록세·양도세 감면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함
 - 아울러 생산 지원과 인구 유출이 가능하도록 타지역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
 - 단지내 부지 확보 문제로 첨단산업단지는 생산 기능 이외의 지원 업무중 상당 부분이 단지 외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
 - 따라서, 기존 연구 단지와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, 물류 거점 지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인근 지역에 추가적인 용지 확보도 가능토록 해야 함
 - 또한 노동집약적인 하청 기업이나 부품 기업들이 수도권 근처 지역에서도 첨단단지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하여 인구 유출을 촉진해야 함
 -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
 - 현재 첨단단지 예정지역은 「수도권 정비 계획법」상 산업 집중화에 따르는 환경·교통·주택 문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 지역으로 지정하고, 「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」로 공장 설립을 제한해 왔음
 -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협의 과정을 통해 집중에 의한 폐해를 억제할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
 - 특히, 주력기업의 공장 증설시 환경 기준 강화, 고용 억제를 위한 자동화, 사원 주거 대책 등의 조건을 해당 기업이 갖추도록 해야 함

(정 반 석)